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치매환자 부양자 446명 조사해 보니...

끝 없는 간병에 4명 중 1명꼴 ‘실직’

평균 4년 1개월 하루 9.6시간 간호 등 매달려
심리적 부담 최고조... “지원체계 구축 절실”

끝 없는 치매노인 간병으로 4명 중 1명은 생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일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6개월 이상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 4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양자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치매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함이다. 치매노인을 돌본 기간은 1~3년 40.8%, 3~5년 20.4%, 5~10년 16.4%로 평균 4년 1개월 동안 간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딸 30.9%, 아들 30%, 며느리 23.3%, 배우자 12.1%였으며,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6시간에 달했다. 치매노인을 돌볼 때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중복)에는 실금·실변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 수면장애 44.1%, 거부적 태도 30.7%,

배회 및 이탈 25.3% 순이었다.

이어 부양 부담에 대해서는 ‘치매 어르신 수발이 끝이 없다고 느껴짐’, ‘가족간 갈등이 심화됨’,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이라는 문항을 선택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조사 대상 가운데 111명(24.9%)이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실직을 경험한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의논한다’ 37%, ‘혼자 참고 넘긴다’가 35%로 대부분 소극적 해소에 그쳤다.

이로 인해 ‘중종 슬프고 우울함’

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함’을 가장 큰 심리적 부담으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매 정책 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치매안심병원 확충 11.4%, 주·야간보호 서비스 강화 11.2%, 방문간호·요양 10.3%, 치매 부양물품 제공 확대 8.4% 순이었다.

정여진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부양자를 위한 특화사업·역량 강화 추진 ▷부양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구축 ▷제주도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송은범기자

“고교 무상교육, 제주가 마중물 됐다”

이석문 도교육감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

대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는 데에 더욱 뜻 깊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5년 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가량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기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게 된다.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그 다음해부터 고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김지은기자



절정 맞은 돈내코 단풍 2일 서귀포시 한라산 둘레길 돈내코 계곡을 찾은 탐방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든 계곡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불법 주·정차 11만건... 전년비 38% ↑

시민신고제 4563건 과태료 부과
제주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제주시내 자동차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동별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1만3045건으로 전년 동기(8만1769건)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으로 접수된 총 9433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563건이다. 3259건은 계도 처리됐다. 제주시는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시민신고제 지속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지

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신고제 장소별 과태료 부과 내역(총 4563건)을 보면 횡단보도가 3167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다리 위 769건, 버스 정류소 480건, 교차로 모퉁이 76건, 소화전 71건이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 102개 노선(86.86km)에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224대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무인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주요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고정식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등 제도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우리 아이들 이런 야채 먹어요” 2일 제주고등학교에서 열린 제주학교급식체험마당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급식 관계자로 부터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유기농야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5기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4일 위원 위촉식·소통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4일 제주 난타호텔에서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제5기 위원 위촉 및 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비롯해 학계, 경제·고용·노사관계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현안 구심 역할을 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대 법전원 “지방 로스쿨
법관·검사 임용 의무화해야”

지방 로스쿨 출신도 해마다 의무적으로 법관과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제주대는 2015년 법전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 임용된 이후 신입 법관 배출이 전국 25개 법전원 중 중위권(13위)을 기록했다. 그동안 제주대 법전원이 배출한 법관은 김주완·정영민·김상현씨 등 3명이다.

제주대 법전원 측은 “로스쿨도 서울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해마다 법관과 검사들 각 1명 이상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선희기자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개최를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제주

JEJU OLIVE FLOUNDER

세계 일류 상품.

제주광어와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광어!

조합장 한용선

상임이사 | 김광익

이 사 | 백신애, 김수중, 김형철, 이운수, 김지택, 김용범, 김창유, 고민철, 오재혁

감 사 | 강해원, 김두훈

본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17
Tel. 064-727-6105 Fax. 064-727-6611

제주어류양식수협연합회